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법적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중준(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실 부연구위원)



1.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배경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화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입법 체계와 법제 전략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법제처·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7년 4월 7일 민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개혁이나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 치중되어온 논의들과 차별화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

이번 학술대회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 및 이현환 한국 공법학회장과 송석운 한국헌법학회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총 4개의 발제와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오 박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제 과제’를 제1주제로 하여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합리적 규범체계의 상세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박사는 합리적 재량행사를 넘어서서 실험조항, 일출조항 및 기술혁신에 대한 주기적 평가(감독) 등의 제도적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제2주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빅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김교수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 인권리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내용과 문제점 및 개별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초연결사회에서 정보주체의 무력화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규범적 원칙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제2세션은 총론적인 차원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기 위한 전체적인 입법적 대응 방향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제3주제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입법업무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이창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행정환경은 시민권 인식향상과 수요 다원화, 정부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 공공과 민간 영역 간의 경계성 모호성 확대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새로운 입법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업무 효율화 방안으로서 통합적인 입법 평가제도의 도입, 의원입법 지원체계 구축, 신속정부입법 절차, 거시정부입법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제4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률 제·개정 시 국회·행정부 협력방안’으로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임종훈 교수가 미국에서의 법률 제·개정 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입법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임교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청부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이슈, 국회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입법 컨트롤 타워’ 정립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3. 학술대회의 의의 및 성과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법학 및 행정학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과 법제처 등의 유관기관 실무자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에 대한 입법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법제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심화 및 확산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